



[경제종합] 케이뱅크 몸값 똑똑 연내 상장 글썌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47.21 (-20.64)	코스닥	754.89 (-5.46)
금리 (국고채 3년)	3.847 (+0.024)	환율 (원/달러)	1394.20 (+4.70) (21일)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성료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갑질 유통사에 칼 빼든 공정위 한기정 신임위원장 행보 촉각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논의 동시에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중점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유통업체들을 향하고 있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간 곳은 신세계 그룹의 e커머스인 SSG닷컴이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판촉비용을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는 한 위원장의 취임 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는 술한 유통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줄줄이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와 규제 해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납품업체 갑질부터 유통기업간 공정 경쟁까지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유통가의 혐의는 고질적인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다. 대금 지급 지연과 판촉 및 폐기 등에 대한 비용 전가, 판매가격 조정 압박 등이 갑질 방식이다.

최근 플랫폼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대등한 관계에 가까운 타 대기업에까지 적용된다. 경쟁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을 올리도록 강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은 광고를 요구함으로써 보전하고 때로는 매입중단도 강행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의 70%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일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주요 오픈마켓인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업체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14개 문제를 지적했다. 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즉각 자진 시정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문제 외에 유통사간 경쟁 또한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사안이다. 온라인 장보기가 정착하면서 새벽배송이 유통사의 승부수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의 사업 참여 불가 문제가 공정 문제로 떠올랐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된 탓에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작업을 할 수 없어 e커머스와 사업 개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반도체 투자 '골든타임' 놓친다 'K-칩스법' 국회 조속통과 촉구

美, 반도체 산업 527억달러 투자 중, 자금률 70%까지 확대추진 등 국가적 차원 대규모 투자 각축전

韓 효자 수출상품 경쟁력 중요 최형두 의원 "빨리 통과 시켜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뉴스시스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강국들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반도체특별법인 'K-칩스법'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칫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웨이퍼를 들여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자국 반도체 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칩 액트'에 서명했다.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형 반도체 강대국인 대만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를 필두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축전'이

은 상임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계류돼 있는 등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선 기업의 편의에 맞춰 사업자와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확대한 점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안이 상정한 것만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산자위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한민국을 기술 클러스터, 주권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기자에게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오는 기초 아래 진행하는 것"이라며 범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中, 2035년 3명 중 1명은 '노인'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13년 후 고령인구 4억명 초과 예상 작년 출생인구, 전년비 11.5% 줄어

중국이 초고속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는 2035년에는 고령 인구만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난 것은 물론 연금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21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오는 2035년경 4억명을 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 이상으로 3명 가운데 한 명은 노인인 사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2억670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인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다.

작년 출생인구는 1062만명으로 전년 대비 11.5%나 감소했다.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출생)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다. 작년 인구 증가 수는 48만명에 불과했고, 올해 또는 내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역시 중국의 인구가 줄면서 내년엔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유엔의 추정치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억2600만명, 14억1200만명이다. 향후 순위를 뒤집은 것은 출산율이다. 작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중국이 1.15명, 인도는 2.0명이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게 벌써 2016년이지만 출산율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오래 지속된 한 자녀 정책으로 가임여성수가 절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 증인 채택 '신경전'
▲ 한총리, 'IRA 미흡 대응' 지적에 "문제 일어난 자체 유감·송구" /사진 뉴스스

▲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與요청 거부
▲ 통일부, 文정부때 신설한 사회문화교류운영과 폐지



▲ 경실련 "국회의원 28명,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 소명 안돼" /사진 뉴스스
▲ 전문가 "北 핵무력법제화로 핵전쟁 우려 커져... 中 밀착 경계해야"